

20대 국회의원 선거 걸림돌 후보자

■ 경제민주화 및 불평등 해소 걸림돌 후보자

1.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2.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 서민주거안정 걸림돌 후보자

3.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 국민통합 걸림돌 후보자

4.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5.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6.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도덕성·자질 걸림돌 후보자

7.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8. 김석기(새누리당, 경북 경주)
9. 조전혁(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10. 이은재(새누리당, 서울 강남병)

■ 경제민주화 및 불평등 해소 걸림돌 후보자

1.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 ‘초이노믹스’로 인한 가계부채·국가부채 증가, 경제양극화 심화, 친재벌 정책 추진 등

1) 친재벌 정책 추진

① 재벌기업 및 주식부자를 위한 세제정책

-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함.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종합소득 2천만원이상 배당소득 고소득자에게 9천억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가져오는 주식부자들의 감세정책임.
-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임.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

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함. 대기업은 지급 능력이 있고, 대응교섭력이나 동일업종 비교임금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세제 지원이 있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큼.

-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의 법인소득 비중은 높고 있으나,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법인부문이 가계보다 실질적으로 담세능력이 큼. 그럼에도 법인세는 전 정부에서 인하되어, 재벌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최경환 의원은 장관 당시 인상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 주장함.
- 아울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인수합병시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편법 승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은 친재벌법안이었음. 그럼에도 최 의원은 장관시절 원샷법이 통과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명목으로 강하게 밀어부친 결과 통과됨.

②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벌건설사 특혜

- 최경환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음. 이에 경실련은 2015년 11월 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음.

③ 대한항공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학교앞 호텔건립 추진시도

- 2014 8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함. 이는 당시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대한항공을 위한 법이었음.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인식은 천박하다고 볼 수 있음.

2) 서민경제 악화

① 가계부채 급증(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따른 결과)

- 2014년 6월 부총리로 내정되자마자 밝힌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는 발언으로 단번에 금융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이끌어냄. 즉 2014년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지역 구분 없이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완화함. 아울러 부동산 금융규제(LTV·DTI)완화는 2015년 7월31일부로 일몰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을 연장 연장함. LTV, DTI 완화 등 가계부채 관리 부실로 인해 현재 1200조원이 넘어가는 가계부채 급증을 불러 왔음. 이는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

화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임.

- 가계부채는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1,166조원에 이르렀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480조원이나 되었음.

<표>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단위 : 십억원)

구분	2014년 2/4분기	2014년 3/4분기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가계부채	1,035,889.5	1,056,441.5	1,085,259.2	1,098,305.0	1,131,535.5	1,166,037.4
주택담보 대출액	432,038.7	445,163.6	460,603.3	469,871.7	466,851.4	480,072.5

출처 : 한국은행

②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대다수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했음. 담뱃값 인상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가구 등 주로 사치품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부과하는 국세로 이를 통해 매년 1조 7천억원 가량 확보할 수 있어 명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임을 알 수 있음. 즉 배당소득증대세제 같이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담뱃값 인상과 같이 서민관련해서는 증세를 하였음.

③ 청년 실업의 증가

<표> 청년 고용율 및 실업률

구분(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청년층 인구(천명)	9,512	9,550	9,507	9,499
실업률(%)	8.0	7.4	8.7	9.3
고용률(%)	41.1	40.1	40.5	41.7

출처 : 통계청

- 2015년 청년 실업률은 9.3%를 기록하며 IMF금융위기 이 후 최고에 달함. 청년 고용률은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인구가 감소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고용률은 지표상 나타나는 수치보다 낮음.
-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 최경환 경제팀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내놓았음.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보다 사업주가 이미 계획했던 신

규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잘 못 설계되었음을 지적함.

3) 국가채무증가 등 재정악화

① 국가채무의 증가

구분(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채무액(조원)	443.1	489.8	533.2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2.2	34.3	35.9

출처 : 국가통계포털, 기획재정부

- 최 의원은 장관시절 가계부채 관련 실패와 더불어 국가부채 관리 또한 실패하여, 2014년에는 국가채무가 533조원에 이르렀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기준으로 595조1천억원인 국가채무가 올해 말 644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② 국가재정관리

단위 : 조원

구분(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통합재정수지	18.5	11.8	13.5	-7.0
관리재정수지	-17.4	-23.4	-25.5	-46.5

자료 : 기획재정부, 2014년까지는 결산기준, 2015년은 추경예산 기준

- 국가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2015년 추경예산기준 (-)46.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음. 이는 메르스사태 예산 때문이었다고 하나, 2014년 까지도 적자폭이 계속 커짐을 볼 때,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할 수 없음.

4) 자원외교 실패 관련 책임회피

- 자원외교 부실투자로 인해 자원 공기업들이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진상규명을 회피.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건과 관련해 "법률적·형식적으로는 지휘라인에 있었으나, 내용적·실질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

5) 법치주의 무력화 발언 등 자질 문제

- ① **중대범죄 대기업 총수 사면시사 발언** : 경실련 검찰고발(직권남용, 직무유기)
- 2014년 9월 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최경환 전 장관은 또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 및 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함.
- ② **선거개입발언** : 2015년 8월 28일,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경제정책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선거 개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음.
- ③ **전관예우 발언**
- : 최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이상일(경기 용인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제가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전관예우라고, 친한 공무원이 수두룩하다"며 "이번에 이상일 후보를 꼭 좀 당선시켜 주시고 이우현(경기 용인갑) 후보도 세트로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전관예우를 발휘해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음. 이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이력을 활용해 국가예산을 멋대로 하겠다는 발언이나 마침가지임. 이는 박 대통령이 전관예우를 ‘공직사회의 암덩어리’, ‘오랜 적 폐’라고 척경을 지시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2.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 친재벌 정책 주도

1) 친재벌적 법률 개정 시도

① 상속세 완화를 통한 부의대물림 추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매출액 상한기준 5천억 원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율 100%로 확대를 추진함.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시도

-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에 나섬.

③ 재벌 특혜적 선정방식 개선 없는 기간연장 법안 발의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나섬. 면세점 사업은 현재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매출 대비 0.05%)로 인해 그간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의 경우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반면, 수수료는 몇 억 원도 채 안되었음. 시내면세점 사업은 롯데호텔과 호텔신라 등 재벌 특혜적 사업이라는 점이 2015년 공론화되었음. 그럼에도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 없이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허기간만 연장하려는 것은 재벌 특혜를 연장한다는 의미임.

2) 친재벌 발언

- 2014년 8월 12일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일부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부자나 재벌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겠지만, 부자나 재벌이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늘리고, 세수를 확대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면 모든 국민, 특히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낙수효과'를 강조함. 재벌에게 혜택 가지만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기만적인 발언을 함.

3) 재벌기업 활력 제고 강력 추진

- 2014년 8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국민, 궁극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하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에 대해 강력 추진을 했음.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삼성 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규모 인수합병시 총회 등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것으로 재벌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었음.

4) 국정감사 장외발언 논란

- 2019년 9월 15일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을 겨냥해 "피감기관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욕박지르고, 인격 모독적이고 인격 살인적인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고 말해 물의를 빚음.

5) 서민주거안정특위 활동 불성실

- 나성린 의원은 2015년 11차례 진행된 서민주거복지특위 출석을 단 2차례만 하여,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여,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노력이 없음을 보여줌.

■ 서민주거안정 걸림돌 후보자

3.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부정**

- 이노근 후보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져 살 집을 찾아 힘들게 살아가는 '전세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강하게 부정함.
- 주택은 산업이다. 그래서 경쟁을 붙여서 자꾸 투자해서 거기에 짓게 해야 된다, 그래서 120%, 130% 갈 때 이것은 더 이상, 주택복지의 개념은 순수하게 관리적인 측면으로 가고, 공급 부족이니 이런 것은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 “우선으로 시장원리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택 공급이 넓게 돼서 가격도 싸지고 임대료도 싸지고 월세도 싸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정부에 맡긴다면 정부 실패를 초래하는 겁니다.”(2015.2.24. 서민주거복지특위 3차 회의)
- 짓는 방법이 초점을 맞춰 짓고 공급하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야지, 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해 가지고 이게 어떤 부작용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다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20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생각을 해야지 당사자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있는 것을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요금을…… 자유롭게 공급을 많이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2015.6.9. 서민주거복지특위 7차 회의)
- 경제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정책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2015.11.19. 뉴스핌 인터뷰)

*** 세입자의 주거안정 제도도입 반대**

- 이노근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관되게 주거문제는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라 주택정책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도입을 반대함
-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세의 경우에 3%, 5% 이렇게 딱 상한을 정해 놓으면 웃돈 더 주는 놈한테, 나라도 당장 웃돈 더 주는 놈한테 호감이 있지. 그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자꾸 주거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블랙마켓 생기면 이것 감당 못합니다.”(2015.9.3.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1차 회의)
-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주택만 가지고 대중적 요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하자, 임대료상한제를 어떻게 하자, 이거야말로 아픈 데 그냥 마취주사 한 대 놔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2015.12.29.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 5차 회의)

- 이렇게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주택을 짓는 투자자들이 투자 수입 다시 말해서 임대료 수입이 감퇴한다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규를 민간시장에서 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하죠. /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5%로 제한해 놓으면 당장 민간시장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2015.9.24.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 부동산 불로소득 확대 및 기업특혜 입법활동**

- 이노근 후보의 19대 국회 입법 활동은 건설사와 지주, 건물주, 집주인에게 이익을 많이 줘 이윤을 극대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임.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불로소득을 키우려 함. 그 결과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기업이나 집 부자, 땅 부자에게 돌아가고, 반면 세입자 등 서민들은 거리에 쫓겨나 주거불안이 심화됐음.
- 불로소득을 키우고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10개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3법 중 하나인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입법을 비롯해 용적을 상향과 층·고도 완화, 정비구역 지정 기준연한 축소, 주택거래신고 폐지, 기부채납 및 개발이익 완화나 면제 등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다수의 입법을 발의함
- “주택거래신고제, 이것은 사실상 저는 실효성도 없는 괜히 거추장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2014.12.22.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정부의 확정부채가 지금도 LH만 한 430조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민간시장을 활성화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복지 개념만 도입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3차 회의)
- “재건축 과잉규제로 인한 재건축시장의 장기 침체, 주택 공급난, 노후 공동주택의 슬럼화, 자원 배분의 비효율, 재산권 및 거주권의 침해,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 역기능 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준공 후 최장 40년간 재건축을 묶어 놓은 상태로 이는 지역별 형평성에도 위반되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합법성 여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2012.9.18.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지금 일선은 생각지도 않고 이윤에 비하면 과도하게 환수해요. 이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장치를, 왜냐하면 여차피 뉴스테이가 잘 촉진되게 하려면 과도하게 기부채납, 공공이라는 명문으로 해서…… 그거 안전장치 해 놓아야

돼, 그거에 대한 제지장치를....(2015.6.17.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

- “내가 여기서 의문시하는 것은 이것 허가조건을 붙이면서 기부채납하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성이 또 떨어지는 거야.” “하여튼 ‘환경’자만 나오면 완전히 알레르기에 걸려 가지고 나라 사업, 국제 사업 같은 것이 그냥 좌초되고 이러는 것은,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야 돼요.”(2015.12.2.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

* 막말논란 및 자질문제 제기

- 이노근 후보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그만 단서를 갖고 탐정소설 쓰듯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단정하고, 확대하고, 왜곡·발전시킨다.”며 “요새 정치인들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며 막말논란을 일으킴.
- 지난 2015년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가 끝나자, "전문위원이 주택문제 도시계획문제 기본적인 인식 부족하다"며 "수석전문위원 거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당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함.
- 지난 2015년 11월 16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이번 사태가 발생해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나 불기소 재판에 회부하면 문제가 좌파 검사 자칭 진보 검사, 판사 역시 진보 판사라든지 좌파 판사들이 무혐의·불기소·무죄 판결을 내놓은 게 상당히 목격됐다"고 발언했음.

* 복면금지법 대표발의

- 복면금지법 대표 발의 :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을, “차량, 사다리, 각목, 쇠파이프, 밧줄까지 준비해서 과격한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소위 말하는 유사범죄단체로 보인다” (2015.11.16,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 참석) 집회시위 참가자를 폭력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5.11.26.).

* 4대강 후속사업 주장

- “일부 가장자리에 녹조가 발견된 것을 일부 언론에서 마치 강 전체에 녹조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2013.10.14. 국토교통부 국감)
-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2015.6.25.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 국민통합 걸림돌 후보자

4.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 국정원 댓글 사건 옹호

- “원세훈 증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했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도 전혀 무관하게 어떻게 운명처럼 이런 늪에 끌려 들어와서 오늘날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곧 개인적인 불행이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이 틈을 타서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힘을 어떻게 뺏어 보려는,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종북 세력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2013.08.16.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8차 회의)
-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이 문서들이 다 지금 협조자의 말에 따르더라도 다 위조됐다고 할 순 없다"며, "위조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위조든 조작이든, "국정원이 지금 그렇게 개입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정원 개입 여부는 완전히 부정하고 옹호함.(2014년 3월 1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국회에서 주요 쟁점 사안으로 거론되던 2013년 4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정부 질문은 생략한 채 국무총리를 향해 "종북 세력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달라"며 "국회 본회의장 안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지 않나 묻고 싶다"는 말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킴. 국회 안에 종북 세력이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여당과 야당 의원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감.
- 2013년 5월 10일에는 자신의 공식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를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문제가 됨. 김 후보자는 춘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누굴 응원해야죠"라고 물었고, 아이들이 "당연히 미국이요"라고 답하자, "담임선생이 전교조는 아닌 모양입니다. 이래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영똥한 글을 올림.
- 2013년 11월 3일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위에 나서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을 향해, 페이스북에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올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삼.

*** 세월호 수색작업 중단 및 인양반대 발언**

- “저는 이 세월호 수색, 이제는 좀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자는데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그만두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수사 두 분, 소방대원 다섯 분을 비롯해서 11명이 됩니다.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 “하루에 비용만 3억 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 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 이것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2014년 10월 20일, 광주고검 국정감사)
- “인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크레인을 걸고 로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잠수사들이 또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희생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사고 난 직후에도 ‘이거 빨리 들어 올려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지 이걸 들어 올리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하면 특검이나 진상조사가 다 끝난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

*** 경찰 물대포 맞고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에 대한 '시위대 폭행설' 등 막말·조롱**

- 2015년 11월 광화문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부상을 입은 데 대해 "정황상 아주 상당히 수상한 점이 많다"며 물대포가 아닌, 시위대 폭행에 의한 부상 가능성을 제기함.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한 동영상에 언급하며 "어르신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 어떤 시위대 중 한 명이 몸으로 덮쳐서 주먹으로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있다"고 주장함.

*** 국회 윤리위원회 최다 회부**

- 김진태 후보자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4번이나 회부돼 19대 국회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이 윤리위에 제소됨.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12월17일 김 의원이 야당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라고 말해 사건의 본질

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했다며 징계안을 제출.

-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에게 “왜 반말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등의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을 일삼아 2013년 한 해 동안 3차례나 징계안을 윤리위에 회부함.

5.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 국정원 댓글 사건 옹호

- 이 사건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연계해서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그 발단의 핵심입니다.”(2013년 7월 24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인터넷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북한 및 종북 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2013년 8월 5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 세월호 유가족 ‘노숙자 비유’

- “국회에서 (유가족들이) 저렇게 있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디 뭐 노숙자들 있는 그런...”(2014년 8월 1일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의원총회 직후 단식 농성 중에 빨래를 널어놓은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하면서)

* 청소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 발언

- 2013년 11월 26일 비정규직인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노무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 사람들(국회 청소노동자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된다"면서 "특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라고 말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놓고 짓밟음.

6.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 /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적절한 비유**

-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 중 ‘VIP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을 벌이며 회의가 지연되어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회의 진행을 촉구하자, 유족들에게 “당신 뭘니까”라며 샷대질을 하고, “유가족이다”라고 밝혔지만 조 의원은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고성을 질러 소동이 벌어졌으며, 결국 속기록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해 회의를 반나절 가량 지연시킴.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전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방청석의 일부 유족들은 “어떻게 닭과 비교하느냐” “희생자가 닭이에요”라며 강력 반발. (2014년 7월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 본인 해명 : “국가 재난의 여러 예를 들었는데 유가족분들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

***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포함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 헌법적 가치 무시**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있던 2016년 2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찍힌 유승민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자 “헌법보다는 인간관계가 먼저”라고 말함.
-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집약한 행동과 사고의 최우선 준칙임. 최근 대통령 존영 논란 등에서 본바와 같이 자질과 능력, 비전과 정책은 제쳐놓고 박 대통령, 권력과의 ‘인간관계’만 중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임.

■ 도덕성 및 자질 걸림돌 후보자

7.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 국민의 사법접근성 침해(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대법원 상고 사건부터 적용하되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함.
-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에 대한 침해 일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함.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가 상고심에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하급심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막말 : 정당 민주주의 훼손

- "죽여버려, 김무성 그런 XX" 등 윤상현 의원이 새누리당 현재 공천 관련 막말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함. (16.3. 언론보도)

* NLL 대화록 말 바꾸기

-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는 공세를 주도하다가 2014년 5월 원내수석부대표를 그만두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실토하여 말함.

8. 김석기(새누리당, 경북 경주)

* 용산참사 과잉진압

- 2009년 1월 폭력적인 강제진압 강행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생명을 잃은 `용산참사`의 책임자였음. 그러나 관련하여 용산 진압작전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음.

* 학위논문 표절 의혹

- 2007년 낸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째로 베낀 이른바 `철판 표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음. 김 전 청장이 베낀 논문은 이종석씨의 2006년도 석사학위 논문인 `방범용 CCTV의 활용에 따른 기

본권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임. 김 후보자가 낸 논문 제목부터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로 이씨의 논문 제목과 거의 유사함. 뿐만 아니라 안민권씨의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논문과 최응렬·김연수씨의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학회 논문도 짜깁기한 함.

*** 일왕 생일파티 참석해 논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공항공사 사장 시절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왕 생일 파티에 버젓이 참석해 논란이 됨. 2013년 12월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천황 탄생일 축하 소연'에 모습을 드러내 빈축을 샀음. 더군다나 당시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 “독도는 내 지역구”, “전쟁 상황에서 위안부가 필요했었다” 등의 망언들이 쏟아져나와 대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었던 만큼 김 후보자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셌음.

9. 조전혁(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 법원의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 공개**

-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함. 2011년 7월 26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13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조 의원에게 명단을 제공받아 공개한 동아닷컴 측에 소송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3천 4백명에게 1인당 각각 10만원과 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법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무지한 태도를 보임.

10. 이은재(새누리당, 서울 강남병)

*** 법인카드 유용**

-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뒤 2012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화장품과 명품을 구매하는 등 유용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남.

*** 용산참사에 대한 막말**

-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2009년에는 '용산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로 지칭하며 “법질서를 무시한 시위대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음.